

[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정부의 AI 데이터센터 메가 프로젝트 : 사업 기회와 법적 리스크

2026.09.29

기획분석

정부의 AI 데이터센터 메가 프로젝트 : 사업 기회와 법적 리스크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퍼지컬AI, AI 데이터센터를 결합해 한국을 AI·첨단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국가전략입니다. 이 중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하고, 반도체·서버·전력·냉각·클라우드 등 전후방 산업까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SK·GS·네이버 등은 1단계로 총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합니다. SK 5GW, GS 2.4GW, 네이버 1GW이며, 장기 확장계획을 포함한 전체 목표는 18.4GW입니다. 투자 유치를 포함한 민간의 장기 투자계획은 약 550조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550조 원은 확정된 정부 예산이나 이미 발주된 사업비가 아닙니다. 실제 투자 규모와 일정은 부지·전력·인허가·고객·금융조달 및 각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여기업은 정책 발표 자체보다 개별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산업생태계와 참여 기회

2026년 7월 출범한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에는 약 400개 기업·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의장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SK텔레콤, NHN클라우드, LS일렉트릭, LG전자, GS, KT, 퓨리오사AI 등이 포함됐습니다.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및 클라우드뿐 아니라 AI 반도체·서버, 네트워크, 전력기기, 발전·에너지, 냉각·공조, 건설·엔지니어링, 금융·보안·시험인증 기업에도 참여 기회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내 장비와 솔루션을 대규모 테스트베드에서 실증하고, 데이터센터의 설계·구축·운영을 패키지로 수출한다는 구상입니다.

2. 특별법에 따른 제도적 지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6월 9일 제정됐으며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와 처리기한을 도입하고, 기한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규정합니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특구 지정, 산업단지·항만배후단지 입주 특례 및 기술개발·해외진출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모든 인허가를 면제하거나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소방·환경·전기 등 개별 법률의 실체적 기준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청취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의 구체적인 설비·규모 기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의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단계이므로 미리 특례 적용을 전제로 투자 일정이나 수익성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있으므로, 양쪽 법령 체계의 정합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프로젝트 참여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리스크

○ 전력 확보

정부의 지원 발표나 인근 발전소의 존재만으로 실제 전력공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되더라도 송·배전 용량 부족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참여기업은 계약전력 규모와 실제 전력공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력공급 일정이 데이터센터 건설 및 운영 일정과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송전선과 변전소 건설, 계통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전력공급이 지연되거나 약정한 용량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계약 조항도 필요합니다. 계약 해제권, 공사기간 연장, 손실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권 이전 과정에서 기존 계약전력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관계의 이전 및 승계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전력 확보는 토지매입, EPC 계약, 금융조달 및 고객계약에 앞서는 사업의 핵심 선행조건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인허가와 입지

AI 데이터센터에는 국토계획, 산업입지, 건축, 전기, 소방, 환경 규제가 중첩됩니다. 산업단지 내 부지인 경우도 데이터센터 입주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데이터센터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각종 인허가의 선후관계와 예상 처리기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운영구조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주체와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영위탁 방식이 산업단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이 기존 인허가에 미치는 효력과 추가적인 인허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기반시설, 세제 지원 등을 약속한 경우에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관련 예산이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지를 추가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일부 인허가가 일괄 처리되더라도 모든 행정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인허가의 대상, 선후관계, 담당기관 및 예상 처리기간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프로젝트 전체의 인허가 로드맵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 환경·지역사회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많은 전력과 용수를 사용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비상발전기 운영, 소음, 폐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전선과 변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 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개발 과정에서 지역사회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필요한 환경 인허가와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비상발전기, 소음, 폐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지역사회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인허가 신청 이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환경 또는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로 홍보할 경우에는 실제 전력조달 구조와 환경성가가 홍보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EPC·장비 공급계약

건축, 전력, 냉각, 서버 및 네트워크 중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데이터센터의 가동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각 설비가 개별 성능기준을 충족했다라도 통합 시스템이 약정된 성능과 가용성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에서는 설비 간 설계와 인터페이스 책임을 명확히 배분해야 합니다. 통합시험과 성능검수의 기준 및 완료 시점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지연, 성능 미달 또는 공사비 증가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과 보상 범위도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AI 장비의 빠른 세대교체를 고려해 향후 고밀도 서버와 액체냉각 도입 가능성도 초기 설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급망·수출통제

고성능GPU와 네트워크 장비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통제, 경제제재 또는 공급부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에서는 수출허가 취득과 경제제재 관련 법규 준수의 책임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장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체품과 사양변경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환율·관세 변동 위험의 부담과 장비를 공급하지 못했을 때의 선금금 반환 조건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국산 장비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성능 미달, 정부지원금 환수 및 기술성과의 귀속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 고객 확보와 사업성

데이터센터의 수익성은 발표된 시설용량보다 실제 가동률과 장기 고객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핵심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객계약에서는 최소 사용량이나 최소매출 보장 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도해지 및 고객의 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력비 등 운영비의 변동을 이용료에 반영하는 방법과 가용성 서비스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위반에 따른 책임도 정해야 합니다.

장기 고객 없이 건설을 먼저 추진한다면 AI 기술 변화, 경쟁시설 증설 및 컴퓨팅 가격 하락 위험을 사업성 분석에 반영해야 합니다.

○ 금융과 정부지원

정부가 정책금융을 추진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전력 확보, 인허가 및 장기 고객계약의 수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PC 사업자의 완공 보증과 사업주의 추가 출자의무도 협상해야 합니다. 보조금이나 세제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유지조건과 환수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향서는 법적 지급보증이나 최소수입 보장과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 데이터·보안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고객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또는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및 국외 이전의 요건을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통지·공동대응과 백업·재해복구 책임도 정해야 합니다. 데이터와 AI 모델의 소유권, 재사용 범위 및 계약 종료 시 반환·삭제 절차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금융·의료·국방 고객을 유치하려면 분야별 보안·망분리·인증 요건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 컨소시엄 운영

개발사, 발전사, 통신사, 건설사, 장비기업 및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면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계약에서는 참여기업별 출자·기술·영업 등 역할과 추가 비용의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절차와 이해상충 또는 교착상태의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분양도, 참여기업의 중도이탈 및 사업 실패 시의 처리절차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사업자 간 공동입찰이나 기술협력에서는 가격·고객·공급량 등 민감정보의 공유 범위를 제한하는 경쟁법상 통제도 필요합니다.

4. 참여기업의 준비 방향

참여기업은 먼저 사업에서 담당할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발·운영, 투자, 전력공급, EPC, 장비공급, 클라우드 서비스 등 역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인허가, 자금조달, 성능보증 및 운영 책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실사도 필요합니다. 토지 권원과 입지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공급 단계와 인허가 진행 상황도 점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약속이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나눠 사업 일정과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급기업은 단순한 업무협약보다 구속력 있는 발주계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에는 물량, 납기, 가격조정, 최소구매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검수 기준과 계약 취소에 따른 보상 조건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 수주 가능성을 높아집니다.

프로젝트 전체의 계약관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토지, 전력, EPC, 장비, 금융 및 고객계약의 책임과 일정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계약에서 회수하지 못한 위험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구조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업구조 및 인허가 자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과 전력·입지·건축·환경 규제를 검토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및 인허가 로드맵과 관계기관 협의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금융 및 계약 지원

AI 데이터센터 부지, 전력 확보, 인허가 등 주요 법률문제에 대한 실사 그리고 투자기구의 설립과 부지 매입, 건축에 필요한 각종 계약 및 법률문서의 작성을 지원합니다.

컨소시엄 구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요건을 파악하고 연결해줍니다. 또한 전력공급, EPC, 장비공급, 클라우드 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이용계약의 작성과 협상을 지원합니다.

* * * * *

글로벌 통상산업 이슈 FOCUS 1

일반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는 어떻게 다른가?

일반 데이터센터(이하 ‘DC’)와 AI 데이터센터(이하 ‘AIDC’)는 모두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설비 구조가 다릅니다. AIDC는 대규모 AI 연산을 처리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전력, 냉각, 건물 설계까지 기존 데이터센터와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둘의 차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 DC는 웹사이트, 기업 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게 중요합니다.

반면 AIDC는 대규모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이 중요합니다. 완성된 AI 모델을 이용해 챗봇·검색·추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일반 DC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반시설이라면, AIDC는 대규모 연산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연산장치가 다릅니다. 일반 DC는 범용 연산에 적합한 CPU를 중심으로 서버가 구성됩니다.

반면 AIDC에서는 GPU·NPU 등 AI 가속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 가속기는 대규모 병렬연산에 특화돼 있습니다.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산을 동시에 대량으로 처리합니다. 수천~수만 개의 AI 가속기가 투입됩니다.

셋째, 네트워크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 DC는 외부와 안정적인 연결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또는 다른 데이터센터와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반면 AIDC에서는 내부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서버와 가속기 사이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수천 개의 GPU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고속·초저지연 내부 네트워크와 대용량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넷째, 필요한 전력 규모가 다릅니다. AIDC 서버는 일반 DC 서버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일반 DC는 수 MW에서 수십 MW 규모가 많습니다.

반면 AIDC는 100MW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형 AIDC는 수백 MW에서 1GW 이상의 전력 용량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따라서 AIDC의 확대는 발전소와 송전망을 포함한 국가 전력계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냉각 방식이 다릅니다. AI 가속기는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에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일반 DC는 공기를 이용한 공랭식 냉각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GPU가 밀집된 AIDC에서는 공랭만으로 열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냉각기술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직접칩 액체냉각과 액침냉각입니다. 직접칩 액체냉각은 냉각수를 칩 주변까지 공급하는 방법이고, 액침냉각은 서버를 절연성 냉각액에 담가 열을 식히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건물과 전력 인프라의 설계가 다릅니다. AIDC는 기존 건물에 GPU 서버를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규모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변전설비, 대용량의 무정전 전원장치(UPS) 그리고 고밀도 냉각을 위한 배관이 필요합니다.

향후 지금보다 더 고성능의 AI 가속기로 교체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전력과 냉각 용량의 확장을 고려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건물 완공에도 불구하고 전력 및 냉각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점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AIDC라도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서버와 네트워크의 구성, 운영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DC는 크게 학습용과 추론용으로 나뉘는데, 둘은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학습용 데이터센터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경우 수많은 GPU를 오랜 시간 동시에 동기화해 연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추론용 데이터센터는 완성된 모델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다수 이용자 요청에 빠르게 응답하는게 중요합니다. 전력과 가속기 사용 비용도 낮춰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일반 DC는 웹·기업시스템·클라우드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기반시설’입니다. 반면 AIDC는 막대한 전력과 데이터를 투입해 대규모 AI 연산을 수행하는 ‘고밀도 연산공장’에 가깝습니다.

AIDC는 GPU 서버 이외에도 네트워크, 전력계통, 냉각, 건물 구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 DC와 AIDC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 * * * *

글로벌 통상산업 이슈 FOCUS 2

AI 데이터센터 찬반 여론 - 미국과 한국의 3가지 차이점

최근 미국에서는 AI데이터센터(이하 AIDC)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동네에 짓지 말라”는 지역적 반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도 AIDC의 확장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셉니다.

한국에서도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주민 반발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AIDC 증설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전기요금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AIDC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요금 상승’입니다. AIDC는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고, 발전 설비와 송전망 투자도 늘어납니다.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으로 전가됩니다. 미국 국민들은 “빅테크의 AI 사업 때문에 왜 내가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의 전기요금은 대부분 지역 단위 부과방식이고 민영 회사에 기반합니다. 미국의 전기요금은 ‘지역’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한국의 전력요금 부과 방식은 미국과 다릅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준국영기업인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 역시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특정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고 해당 지역 주민의 전기요금이 더 오르지 않습니다. 즉, 미국과 달리 AIDC 유치와 전기요금 상승의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둘째, AI데이터센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AIDC는 빅테크 회사들의 시설로 인식합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와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AI 경쟁을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기업이 취하고, AIDC로 발생하는 비용은 지역사회가 부담하고 있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과 전력 인프라 지원에 비해 AIDC로 발생하는 일자리도 기대에 못 미치는 편입니다.

반면 한국에서 AIDC는 ‘국가 전략 인프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AI와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호남에 짓겠다고 하자, 호남이 적극 환영하고, 다른 지역은 비판적 여론을 보였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왜 우리 동네에 안 짓고, 다른 동네에 짓느냐”라는 여론이 오히려 지배적입니다.

셋째, 미국은 ‘과잉’에 가깝고 한국은 ‘부족’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AIDC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전력수요와 송전망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기되는 질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한가”였습니다. 최근에는 “도대체 얼마나 더 지어야 하는가”가 중요 질문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를 늦추거나 신규 건설을 일정 기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국은 AI 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AIDC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정리해보면, AIDC에 대해 미국은 반대 여론이 더 강하지만, 한국은 우호적인 여론이 더 강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이 AIDC의 지역 유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지만, 혜택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민영 회사가 전기를 공급하고 주 정부 혹은 지역 단위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국영기업인 한국전력이 전기를 공급하기에 가격통제가 이뤄지고 있고, 전기요금은 지역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결정됩니다. AIDC 설립은 지역의 기업 유치 가능성도 높이기에도 우호적인 여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통상산업정책센터 (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는 단순한 법률 리스크 검토를 넘어,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지정학·통상·산업 환경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전략 컨설팅 조직입니다. 경제안보·수출통제·관세 등 각국 규제의 영향을 정책적 맥락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투자 구조·공급망 재편을 통합 설계하는 것이 센터의 핵심 역할입니다. 방산, 에너지·인프라, 조선, 배터리, 반도체, AI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미국·EU·중국 3대 권역의 규제 리스크를 통합 관리합니다.

관련구성원

장경수

변호사

02-316-4066

kschang@shinkim.com

장윤석

대표변호사

02-316-4385

ysjang@shinkim.com

유정열

고문

02-316-4740

jyyu@shinkim.com

강신욱

대표변호사

02-316-4059

sokang@shinkim.com

이상현

변호사

02-316-4068

shlee@shinkim.com

김세진

외국변호사

02-316-7270

sejinkim@shinkim.com

이호준

고문

02-316-2802

hjoolee@shinkim.com

최병천

전문위원

02-316-7278

bchchoi@shinkim.com

임보경

변호사

02-316-4041

bklim@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02-316-4212

hpak@shinkim.com

고한석

고문

02-316-7288

hsko@shinkim.com